

공진청, ISO 획득업체 지원

무담보대출 · 세감면 등 혜택 부여

공진청은 품질보증 국제규격인 ISO9000시리즈 국내 보급을 위해 이 인증을 획득한 업체에 대해 무담보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진청은 최근 ISO9000시리즈 인증획득 없이는 수출 거래 선과의 상담조차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 제도의 확산을 위해 ISO9000시리즈 인증획득 업체가 신용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업무협약을 신용보증기금과 체결할 계획이다.

또 공진청은 ISO9000시리즈 인증획득 업체에 세금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 인증획득업체 가운데 국내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업체와 외국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은 업체를 모두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최종 논의되고 있으나 국내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업체로 국한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전담 재판부 신설

특허청, 항고심판소 폐지

특허소송의 2심기능을 맡고 있는 특허청 항고심판소가 폐지되고 서울고법 전담재판부가 신설되는 것을 골자로 한 특허심판제도 개선안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특허법 등 지적재산권 보호법령의 개선을 위해 산업재산권의 권리구제절차 개선안을 확정하고 96년 3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특허심판제도와 관련, 산업계와 법조계 사이에서 논란을 빚어왔던 특허심판 관할권 문제가 대법원의 확정안으로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특허청이 1,2심을 관할하고 대법원이 법률심인 3심만을 맡도록 되어 있는 기존의 특허심급제도가 국민으로 하여금 사실문제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 위험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고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같이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특허청의 심결이나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서울고법에 항소하는 특허청의 심판·고법항소심·대법상고심의 심급구조로 바뀌게 됐다.

대법원은 또 특허심판의 전문화 차원에서 특허심리관을 두

고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재판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특허심리관 제도를 시행기로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산업계·과학기술계에서 주장해온 고등법원급의 특허법원 설치와 이를위한 기술판사 도입은 현재 계류된 가건수에서 볼 때 불필요하다고 보고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대법원의 특허법 개정안에 따라 특허사건과 관련, 법원의 사실판단을 받게될 수 있는 길은 열렸으나 신속성이 요구되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 사건에 있어서 소송지연에 따른 시간 및 비용문제와 전문성 확보문제는 여전히 남게됐다.

기술이전 정보제공 · 수집 · 유통

산업기술정보원 부설 전담센터 가동

국내의 기업의 기술이전 정보에 대한 수집·유통·중개 등을 전담할 기술이전 정보센터가 산업기술정보원 부설기관으로 현판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이 센터는 오는 10월까지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10개 지역의 기업체 및 연구소를 대상으로 도입 및 수출희망 기술을 조사, 데이터베이스화 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처음으로 개설한 한일테크노마트와 한미테크노마트를 각각 9월과 11월께 개설할 예정이다.

이 센터는 이와함께 기술이전 정보를 온라인 정보서비스체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내외 기업간 기술교류를 활성화 하는 각종 사업에 나서게 된다.

기정원은 이 센터가 97년까지 59억여원을 들여 이들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라비아인쇄 자격시험 실시

인력관리공단, 12월 13일부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포장과 관련된 그라비아인쇄 실무의 그라비아인쇄 기능사보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오는 10월24일부터 27일까지 원서를 접수하여 11월13일부터 26일까지 시험을 실시하게 될 이번 시험은 인쇄준비작업, 인쇄작업, 후처리작업에 대해 시행하는데 세부항목으로는 인쇄판 점검하기, 인쇄판통결기, 피인쇄체 취급, 잉크조절, 인쇄기계운전, 레지스터 맞추기, 인쇄판통 세척·보관·처리, 공구 및 피인쇄체 정리 등이다.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며 합격자 발표는 12월 19일로 예정되어 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민원실(전화: 715-3212/3)에서 출제기준에 대해 알아보면 된다.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범실시

규격봉투 제작·배포 마무리

환경처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범사업에 대한 시범사업 지역별 준비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환경처 발표에 따르면 시범대상 지역인 전국 33개 시·군·구 중 25개 지역이 조례제정 등 준비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지역도 제정을 서두르고 있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강원도 삼척시는 지방의회의 반대로 조례가 제정되지 못해 실시 시기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봉투가격은 201 기준으로 가정용 기본봉투는 시범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평균 120원 수준이며, 추가봉투는 기본봉투의 약 2배수준으로 책정되었으며, 규격봉투의 제작, 배포는 대부분의 지역이 완료됐으나 일부지역에서는 조례제정 지연 등으로 봉투배포가 조금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 제도에 대한 비판과 문제점을 많이 지적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환경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갖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환경처는 이러한 시범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개선안을 마련,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처는 이와같은 시범실시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YWCA, 배달환경연합, 주부교실중앙회, 환경과 공해연구소, 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등 민간 환경단체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시범실시 현장의 실태를 분석,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하여 이를 토대로 종량제 전국 확대실시를 위한 최종 시행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기술마크 획득기업 무담보 융자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 사업화 지원

신기술마크(NT)를 획득한 업체들이 개발기술을 사업화할 경우 무담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업진흥청 산하 국립공업기술원(원장 김유채)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민해영)과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 NT마크를 획득한 업체들에 대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을 서 개발기술의 사업화자금을 무담보로 융자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 협약에 따라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담보가 없어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었던 업체들의 어려움이 크게 해소됐다.

NT마크는 국내에서 처음 개발된 기술을 국립공업기술원이 평가해 우수하다고 판단되면 부여하는 '신기술제품' 표시로 사업화를 돕기위해 우량기술기업 선정시 우대, 국립공업기술원의 연구시설 이용 및 기술지도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신기술 85건에 'KT' 마크 부여

과기처, 전기·전자·화학 순

과학기술처는 올해 상반기 국산기술인정마크(KT) 심사결과 85개 기술을 국산 신기술로 선정했다.

과기처는 지난해 12월 신청받은 258개 기술과 지난해 심사에서 보류됐던 27개 기술 등 모두 285개 기술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전체의 29.8%인 85건이 국산신기술로 선정됐으며 4.6%(13건)는 차기심사의 재심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국산 신기술로 선정된 85개 기술을 분야별로 보면 ▲전기·전자분야가 'IGBT소자를 채용한 50kw급 인버터 제어기술'(금성계전) 등 28건 ▲화학·생물분야가 '스핀 본딩에 의한 고성능 필터소재 제조기술'(신양화성) 등 23건 ▲기계분야가 '소형 승용차용 전륜구동형 자동변속기'(현대자동차) 등 18건 ▲정보통신 분야가 '전자사진 방식의 일반용지 팩스'(삼성전자) 등 10건 ▲금속·비금속 분야가 '냉각단조 및 프레스 금형의 탄화바나듐 코팅기술'(주문열처리) 등 6건이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61개(71.8%), 중소기업 24개(28.2%)가 신기술로 인정받았는데 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가 13건으로 가장 많고 럭키 8건, 금성사 7건, 현대자동차 5건, 미원유화와 금성전선이 각각 3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주관으로 실시된 국산 신기술 인정마크 제도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대상기술을 선정하는데 하반기에는 6월중에 신청을 받아 오는 9월경에 심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과기처는 지난해 모두 108개의 기술에 국산 신기술인정마

크를 쓰도록 했다.

KS 국제 표준화 추진

공업진흥청, 5천종 국제표준에 일치

공업진흥청은 KS규격을 97년까지 국제 표준에 맞추기로 했다.

이를위해 97년까지 KS규격을 9천종중 무역거래가 빈번한 분야, 수출이 유망한 분야, 안전 및 환경분야 등 5천종을 ISO 9000 및 IEC 등 국제표준에 일치시킬 계획이다.

공진청은 또한 지방업체들의 표준관련 업무 편의 등을 위해 각 지방 공업기술원도 KS규격 심사기능을 부여하고 인력도 현재의 30명 수준에서 97년까지 70명 수준으로 보강하기로 했다.

국산화 개발품목 고시

상공부, 접지기·코팅기 등 291개

상공자원부는 자동인쇄기와 접지기, 평판타발기, 코팅기 등을 포함하는 기계류·부품·소재국산화 291개 개발품목을 선정, 고시했다.

상공자원부는 제2차 기계류·부품·소재국산화 5개년계획 3차년도 사업의 일환으로 39개 생산자 단체내에 있는 국산개발협의회로부터 금년도 국산화 개발 대상품목을 넘겨 받아 291개 품목을 고시했다.

상공자원부는 이번에 고시된 품목에 대하여는 시제품 개발 자금으로 공업발전기금 950억원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국산화 대상품목을 보면 기계류가 312개 품목으로 가장 많고 전기·전자분야 69개 품목, 소재 9개 품목 등이며 이들 품목이 국산화 될 경우 연간 10억달러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를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상공자원부는 올 하반기에도 추가로 국산화개발 대상 품목을 선정할 방침이다.

유학제품값 인상 불허

상공부, 인상철회 요구

석유화학제품의 생산감축과 가격정상화 등 업계의 지구방안을 놓고 이를 추진중인 석유화학업체와 상공자원부 등 관계당국간에 심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공자원부는 최근 이정한 석유화학공업협회 회장 등 협회장단이 김철수 상공자원부 장관과 면담한 자리에서 감산과 가격정상화 등을 요청한데 대해 타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들어 가격인상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한편 감산허용도 당장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회장단은 원가의 60%에 머무르고 있는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등 폴리올레핀계 가격을 정상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적으로 정기보수 등으로 인해 공급이 달리는 현시점에 국내 공급가의 상당부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석유화학업계는 전세계적으로 4월에 집중되는 정기보수 여파로 기초유분을 비롯 합성수지의 국제가가 지난달에만 톤당 10달러에서 최고 40달러선까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 국내 공급가를 대폭 인상기로 했었다.

이와관련 호남석유화학은 HDPE(고밀도폴리에틸렌)의 4월분 가격(사출용 기준)을 톤당 38만원에서 48만원으로 26.3% 인상하는 등 HDPE 공급가를 인상하겠다고 수요업체에 통보했다.

대한유화는 PP의 가격을, 한양화학은 LDPE(저밀도폴리에틸렌)의 가격을 4월부터 각각 상당수준 인상하기로 했다.

회장단은 상공자원부의 인상불허방침과 관련, 사장단회의를 열고 업계의 대응방안을 공동 모색할 방침이다.

상공자원부는 이날 회장단에 가격인상이 추진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감산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감산허용 여부를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기업 중기조합 가입 늘어

하도급·기술협력 등 겨냥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하는 대기업이 늘고 있다.

기협중앙회에 따르면 올들어 중기조합에 가입한 대기업은 현대중공업, 대한중석, 한농, 한국유리 등 7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현대중공업은 전기조합, 대한중석·한농은 산업로조합, 한국유리는 유리조합, 일진은 지리정보산업조합, 고려산업은 골판지포장조합에 각각 가입했다.

이같이 대기업들이 중기조합에 잇따라 등록하는 것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중소기업체들과의 협력이 중요하고 특히 계열화 하도급거래 기술개발에 발을 맞춰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